

국회 F1·과기원법 폐기, 서남권법은 '기사회생'

F1 대회 지원·광주과기원 학사과정 무산

목포 등 서남권은 민자유치 발전 기틀 마련

26일 광주과기원법개정안과 F1국제자동차 대회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학부 신설, F1자동차 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숙원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가운데 목포·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을 현황해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법 추진된 '서남권 등 남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은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통과와 서남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과기원법·F1법 '좌초' =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 통과에 걸림돌이 됐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전 과기원의

기능 약화를 우려, 광주 과기원의 학사 과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광주과기원법 통과에 적극 반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년당 100명씩 학부 학생 400명, 교수진 40명을 확보해 학·박사 과정을 통합·운영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려던 광주과기원의 꿈은 좌절됐다. 광주과기원은 그동안 2010년 학부 개성을 목표로 75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6만여㎡에 3만㎡ 규모의 건물을 짓고, 학사과정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안 통과 좌절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학사과정 신설은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에서 F1자동차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F1자동차대회지원특별법은 문화관광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주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 통과를 주장하는 바람에 상정조차 못되고 자동 폐기처리된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다음 국회에 이 법안을 재상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나, F1자동차 경주대회장 인근 SOC 건설, 대회 개최권료 지원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남권 발전 기틀 마련 = 하지만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신발전지역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을 현황해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확정된 '서남권발전 종합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국비 15조1천억원·지방비 3천억원·민자 9조2천억원 등 모두 24조 6천억원을 투입해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등 32개 서남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12개 사회간접자본을 마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전남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서남권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고시한 발전·투자촉진지구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35개 법률·허가 사항의 의제 처리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입주기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농지보전 부담금 등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개발사업 소요자금 융자, 국공유지 장기저리 임대,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사립학교 및 병원설립에 대한 특례 부여 등도 이뤄진다.

하지만, SOC를 제외한 32개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성과가 달려있다는 것이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이들 사업에 들어갈 9조8천억원 가운데 91%인 8조9천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서남권 등 남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추진됐다가, 심의과정에서 '서남권'이라는 지역명칭이 빠지고, 특례조항이 삭제된 점 등이 민자유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연공원법 적용이나, 각종 환경개선부담금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에서 종합발전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던 조항이 모두 삭제된 데다, 특정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토지수용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본래 취지가 퇴색되긴 했지만 이미 정부가 서남권종합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고, 각종 부담금 감면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항이 살아 있어서 사업추진에 큰 애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정성필기자
jjnews@kwangju.co.kr

靑, 논란 각료·수석 처리 딜레마

한 지도부마저 '결단' 우회 압박

'이명박 정부'가 출범부터 부동산투기 의혹과 자녀 이종국적 논란에 휩싸인 각료 내정자 처리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특히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4·9 총선'을 앞두고 여론악화에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사실상 '결단'을 우회 압박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크게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각료 내정자를 추가로 교체하자니 정치적 타격과 함께 상당기간 국정공백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그냥 밀고 나가자니 총선이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청와대는 일단 남주홍, 박은경 내정자와 제자논문 표절의혹에 휩싸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모두 흠이 있지만 국정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수석 내정자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이 25일 논문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대결정이 드러나지도 않은 인사들을 무조건 자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료 및 수석 내정자 재검증 문제에 언급,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여다 보는 것이 타당이나 내정 철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반대의 기류도 감지된다. "여론이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각료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문제 장관 교체하라" 압박

- 이영희 노동, 노동위 경력 허위
- 남주홍 통일, 교육비 부당 공제
- 유인촌 문화, 일본 국제 환차익

새 정부 초대각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통합민주당은 장관 내정자들의 각종 의혹을 파고들며 자진 사퇴 내지 교체를 촉구하는 등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교육비 부당공제 의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일본 국제 차이실현 논란 등 의혹들을 추가로 제기하며 대어압박의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문제장관'으로 지목된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보수주의의 생명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와 내각 명단을 보면서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의 역사관과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풀이 이 정도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새 정부에 협력하고 싶는데 자꾸 시험에 들게 한다"면서 "그런 명단을 내놓고 도대체 야당에 어떻게 하란 말인가"며 남주홍, 박은경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측 한노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청안인 기재한 1997~2000년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역임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원식 의원은 "이 내정자가 성향이 전혀 다른 경험과

한국노총 자문위원을 겸임한 점이 이상해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노동부 확인 결과 노동부에서 일차적으로 경력을 정리해 내정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 선거에서 경력위조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관광위 소속 정정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부인 명의로 32억원6천만원 가량의 일본 국제를 보유하면서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 총 9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를 통해 7억원의 환차익을 실현했다"며 "국제를 (계좌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총 입금액은 185억원이, 출금 총액은 192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월금 대비 21.5%의 수익률을 실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교육비 부당공제 의혹이 추가로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소득법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받도록 돼 있으나 남 내정자가 2005~2007년 3년간 아들 교육비로 연간 700만원씩, 2천100만원을 공제받은 기간 부인 역시 매년 700만원씩 공제받았으며 앞서 2003~2004년에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중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6년간 3천600만원의 교육비를 부당공제받았다가 들들나자 대신 때 이명박 당시 후보가 세금을 되갚은 것과 비슷하게 전액 배상 하겠다고 한다"며 "30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남 후보 부인 소유의 오산평도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김포 신도시 땅 매입이 결국 부 축적을 위해 사전에 인지하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땅을 사랑한다'는 명언을 '돈을 사랑한다'는 명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내각은 한마디로 '망연자실 내각'"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